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일시: 7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주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분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토론회 순서

[1부] 서울본부 발족식

- 때: 7월 7일(수) 오후 2시
- 곳: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
- 주요 내용

- 사회 : 상필(장애인교육권연대)

1. 축하 : “함께 응원하는 학생인권조례“ - 함께 하는 이들의 축하 한 마디!
2. 취지와 경과보고 :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3. 창립선언문 낭독 : 청소년1인, 교사1인 공동 낭독
4. 퍼포먼스 : “우리가 만들어갈 학생인권조례” -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

[2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 때: 7월 7일(수) 오후 3시
- 곳: 프란체스코교육회관 3층
- 주요 내용

-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여는말] 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축사]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의원

[발제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제 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 김재석(전교조서울지부)

[토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 하승수(전 제주법대 교수)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학생 참여 방안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강혜승 (참학서울지부)

지역 추진 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구성 경과보고

- 2010년 4월 23일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청소년인권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교육 인권 단체 공동 워크숍을 제안하여 진행함.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공유함
: 후속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 2010년 4월 27일 후속모임 진행.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함.
- 2010년 5월 6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구성을 결의. 1차 회의 진행함.
: 준비모임이 제안하여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중심으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함.
- 2010년 5월 10일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책 협약식을 진행함
- 2010년 5월 25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2차회의
- 2010년 6월 0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3차회의
: 준비모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 서울지역을 필두로 지역 준비모임을 결성하기로 함
: 서울운동본부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발족식 토론회 일정 확정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예정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사업계획

지난 5월 6일 학생, 학부모, 인권 및 제 교육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은 그동안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학생조례 제정’을 전국화 하는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공세는 학생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자율화조치라는 미명하에 부활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 인권적인 조치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와 점수를 통한 서열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사고 등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이자 입시몰입학교의 확대는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제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또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학생인권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거나 심지어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 더욱 중요하게 조례제정은 형식적인 서명이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제 주체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생인권의 개선이 단지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입시경쟁체제를 비롯한 제반의 교육시장화와 그리고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 사회단체 제 주체들이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

□ 조례제정이 몇몇 전문가들의 탁상에서의 작업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의 생생한 요구가 담겨지지 위해서, 그리고 학생인권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의 의의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인받고,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근거를 만드는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 시민추대방식의 교육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더라도 이 일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자기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 나아가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대중적인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순회토론회의 성과에 기반 하여 향후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청소년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 의의와 함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례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인권조례는 그 의의에도 학교안의 학생에 대한 인권으로 그 공간적인 범위가 제약됩니다. 즉 학생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이나 학교밖의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은 조례를 둘러싼 협의의 논의와 실천에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에 취약합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모임은 청소년 인권개선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주요한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등이 함께 청소년에 억압적인 학교문화와 사회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발족 선언문>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우리는 오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교육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벌·폭언·차별 등 온갖 인간적 모멸이 판치는 교육, 거짓 동의와 거짓 자백이 강요되는 교육, 격려와 소통은 온데간데없고 강압과 지시만이 지배하는 교육이 우리가 떠나온 출발지다. 존중의 기쁨과 자유의 공기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뱃머리에 서서 우리의 항해를 재촉한다. 부당한 규정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벌이느라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찾을 길 없던 교사들이 함께 승선했다. 가혹한 경쟁과 혼탁 시스템에 학생들이 불모잡혀 있는 사이 자신조차 불모가 돼야 했던 학부모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외려 독재와 차별의 가치를 확산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는 시민사회도 우리 항해의 동반자다.

우리 앞에 놓인 기나긴 항해의 첫 정박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를 그리는 기본 설계도다. 신민 양성과 특권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교육을 본디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변화의 물꼬다. 이 항해는 '다른 교육은 가능하다'고 믿는 시민들의 열망과 행동을 동력 삼아 전진한다. 교육감의 의지나 교육청의 역할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우리의 항해가 순조로울 리 없다. 벌써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보수의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인권은 위험하다는 꼬드김이 시민들을 현혹한다.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하는 손길도 바쁘다. 교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으름장도 만만찮다.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라는 소박한 진실, '성숙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기회에 비례한다'는 믿음, '학생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맞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침반 삼아, 저 역풍을 단호히 돌파하면서 힘찬 항해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항해는 서울에서 멈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힘찬 날갯짓을 펴는 그날까지, 힘차게 노 저어 나가자.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저 견고한 학교의 담장을 녹이고 인권이 꽃피는 새로운 교육을 일구어내자.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 축하 메시지

경기도에 이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무한입시경쟁 속에서 외면당해 왔던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만큼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학부모들 역시 학내외 인권침해적 상황을 개선할 교육 현장 내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이제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와 힘찬 연대 활동으로,
굳게 닫힌 교문을 활짝 열고 학생 인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교사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간수가 아니라 진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 전교조서울지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첩경입니다."
- 문화연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청소년그대들이 주인입니다.^^
- 원불교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능력이 발휘되는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좋은 학벌'이라는 특권계층의 성체에 들어가게끔 강요하는 입시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권리를 빼앗기고
종종 학교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단단한 '학벌사회'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 안에서의 권위주의와 왜곡된 위계 질서를
민주적 관계로 되돌리고 '교육' 본연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운영 주체가, 교사들이
'학생'을 '지금, 현재의 민주 시민'으로 바라보게 될때
비로소 큰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야말로 그러한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벌없는사회' 또한 서울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은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학생인권의 반대말은 방종도, 방임도, 무책임도 아닙니다.

학생인권으로 그리는 자유롭고 차별 없는 교육이,
사람 냄새 나는 교육이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첫 발걸음이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 서울 본부 발족을 두손활짝 벌려 환영합니다. 와락 와락!!
광주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꼬물 꼬물 피어났지요? 그 과정에서 었치락 뒗치락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움직임 때문에 지금의 서울운동본부도 태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고했나요? no~no~ 어쩌면 조금 늦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소년인권의 주체인 청소년과 그리고 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권이지 않을까합니다.
서울본부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역본부가 그물망이 되어 잘 흐르는 인권의 물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추카 추카~
- 다산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 환경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합니다.
- 친구사이

서울본부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를 기원하며...
-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학 생에게 인권이 어딴어! 공부나 해! 라고
생 각하시는
인 간님들에게 고한다.
권 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떳다!! 무섭지~
-진보교육연구소

학생들은 더이상 어른들의 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는 살아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조례가 자리잡는 그 날까지 공감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첫 걸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노동자학부모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 때: 7월 7일(수) 오후 3시

○ 곳: 프란체스코교육회관 3층

○ 주요 내용

-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여는말] 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축사]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의원

[발제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제 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 김재석(전교조서울지부)

[토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 하승수(전 제주법대 교수)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학생 참여 방안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강혜승 (참학서울지부)

지역 추진 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발제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 당신이 필요해요

지난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했었던 몇몇 보수진영의 꽤나 거대한 반발(“반교육적이다!”, “시기상조다” 등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항들을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권리들을 명시했습니다. 광주/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일본 가와사키 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야자-보충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생 간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 음부즈만 등의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작년에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경기도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의 학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글문서에서 ‘두발규제’나 ‘강제야자’, ‘소지품검사’ 같은 말들이 틀렸다고 빨간 줄도 안 그어지는 현실(...)입니다. 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0교시, 강제야자, 학원 땀방울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규정에 어긋난 데는 없나’ 자신을 검열하며, 양말색깔까지 신경써야 할 지경입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현실들을 바꾸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어떤 이유로든 유보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의 것’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보다 ‘현실’이 필요하다

“경기도는(우리는) 두발자유 된다면서요?”, “새학기부터는 뭐가 좀 바뀐다면서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한창 이슈가 되고, 윤곽을 드러내면서 꽤나 많은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뭔가 좀 되는 동네, 학생인권 보장되는 곳, 이라며 부러운 시선도 종종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의 자신들의 답습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π_π” 같은 패배적 분위기가 해를 넘길수록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 중에 오히려, “인권 따위, 지금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꿈쩍도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니까요. 감시와 통제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인권이 억압받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두발자유-no cut’ 운동, 독립적 학생회 보장 요구 등등 거의 10년 가깝게 학생인권에 관한 운동은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저항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강제성 있는 보장 제도는커녕 공식적 기준, 가이드라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인권텔레워크숍”이란 자리에서 ‘두발규제를 찬성하는 논리’를 그 자리에 함께 한 참가자들이 직접 반박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두발규제 찬성 논리’를 깨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발규제를 찬성하는 것에 덧붙는 그런 논리는 너무 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발자유’의 가능성, 현실성(실제 사례)이 사실 우리 안에도 없어보여서 더 주눅 들었던 것 같다. ‘두발규제 찬성’ 논리는 ‘두발자유’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제부터가 다른 이야기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제법 많이 만들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끈질기게 논의되어왔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안될거야’ 하는 패배감이 녹아있는 건 아닐까요.

어쨌거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부족하다고! 제도적으로 탄탄히 만들어야 될 거야!” 라는 식의 끊임없는 운동사회의 요구들 속에서 그나마도 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아, 뭔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운동을 해나갈 때, ”이 ‘학생인권조례’ 어디를 보면, 학교의 이 같은 조치는 다분히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시정하세요!“라고 요구하기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동안의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논의 또한, ”학생인권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야기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발자유’, ‘체벌금지’로 대표된다 할 수 있는 ‘학생인권’이,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사고, “에이, 거봐, 안 되잖아“하는 체념을 낳았던 현실을 넘어, 진짜 가능하다는 것, 현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같이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운동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보고 싶은 ‘현실’을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가로막는 쟁점들 ‘똑바로’ 바라보기!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학생인권조례의 앞엔 정말 험난한 폭풍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아니,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리 낮다 해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산은 없다고, 우리에게 부딪힐 만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었지요.

특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항 중에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휴대전화허용,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등이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상 보류상태이지만, 이전에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넘겨지고, 안을 심사할 때, ‘집회·결사의 자유’ 부분이 힘 있게 들어간 A안에 비해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들어간 B안이 선택된 것을 보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들게 부딪히게 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조선일보’ 등에서는 ‘좌익 홍위병(?)’을 운운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이 매우 잘 수렴되고 있는데, 굳이 ‘집회의 자유’를 열어놓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등의 이야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까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허용하다니!” “체벌도 안 된다 그러고, 뺨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럼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등등.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학생인권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들은 그냥 한 번에 다 해소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러한 불안감들은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반교육적’이라고들 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설득과 ‘비전 제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나갈 이들, 우리들의 몫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완벽한 대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보수언론의 대표주자, ‘조중동’ 등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선 같은 문제 말이지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자!’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대와 우려들에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는 방임이다!”라는 말에 대해 “아니다, 방임이 아니다.” 혹은 “우려된다”라는 말에 대해, “그런 걱정은 기우다”, 라는 이런 식의 전개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하면 ‘방임’, ‘우려되는 것’이라는 말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민주다.”, “학생인권조례는 책임이다, 자유다.”, “진짜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결론은, 잘 얘기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싸우고! 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학생 당사자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 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는 ‘구제기구 설치’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

가와사키 시의 ‘아동권리조례’를 살펴보면, 세부적 쟁점이 될 만한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그러한 방법이 전략적으로 쟁점을 피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조선일보가 까는 게 ‘학생인권 음부즈만(옹호관)’이라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를 까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쟁점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구체적 권리 조항들을 명시하는 것은, 논쟁이 생길 것을 각오하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권리 조항의 내용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제도적 장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싣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학생인권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찌면 안전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하나하나 담았지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걸로 끝나면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or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라기보다, “학교 안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라는 식의 조항들이 담겼던 것이지요.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 현장성도 없을 것이고, 기존의 ‘청소년보호헌장’ 또는 ‘아동권리협약, 무슨무슨 선언’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 권리’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둘 것인지, 이러한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교권 실추’에 대한 우려 등입니다. 이 쟁점은 분명히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몇몇 보수언론과 교총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사례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만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이신 안양옥 씨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교권보호헌장’의 초안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학교관리자들과 교육청에 대해 교사들의 권리,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하지요. 사실 이게 진리죠. 우리는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권이 실추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노동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면도 많을 것이라는 점(강제야자 같은 거 할 때 봐요, 교사들도 그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야간노동인거죠.),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적.합리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임을 널리널리 알려야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이 밖에도 ‘실효성,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고,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도, 교장 맘대로 휘두르려 하면 어떻게 해요.” 등의 질문들이 꽤 자주 제기됐었습니다.

조례라는 점에서 권한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옹호관 제도나,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계획 수립 같은 내용이 앞으로의 학생인권 개선에 대해 실효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효성이라 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학생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탄탄하게 함을 말하는 것일테지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시

행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막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학교 안의 반인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효력이 없었던,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그 지역의 학생들, 지역의 단체들을 당사자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청의 의지를 돈구고, 부추기기 위한 운동 또한 제정 과정, 제정 이후에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만 기대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도 학생들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실어서 제대로 보장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대상을 어디까지 삼을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청소년인권조례’ 또는 ‘아동인권조례’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명칭에 대한 이야기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학교 안팎의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식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한다.”, “학생은 어떠한 이유(성적, 인종, 성별, 장애여부, 성적지향, 가정환경 등등...)로든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학교 안에서의 지원대책 등을 언급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학교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별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수는,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도 그랬듯이, 차별에 관한 문제는(위낙에 다른 앞부분(?)에서 논쟁이 붙다보니;) 아예 쟁점들에서도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자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냐, 등의 이야기들에 대해, 우리 안에서의 고민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다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청소년/아동인권조례’라는 명칭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이 조례 내용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을 받고 이야기되는 건, 위낙에 학교 안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바뀌어야 뭐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인권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견고한 ‘전제’를 바꿀 운동

그렇다면 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부딪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출범식을 하는 것도, 전국운동본부를 꾸리는 것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정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힘을 싣고, 보다 든든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초·중·고등학생들은 만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설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추진한다고 해도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무상급식, 일제고사 폐지 등의 일정하게 인권적·복지적, 반(反)경쟁교육적인 정책에는 비교적 찬성하면

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망설이게 되는 어른들(유권자들, 학부모들, 교사들 등등.)은 분명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급식조례를 추진하거나 광장조례를 추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한창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될 때, 몇 안 되는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 외에는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모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상급식운동 등에는 적극적이었던 교육/시민운동진영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열성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망설이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어떠한 ‘벽’이 있어서이진 않을까요?

지금도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라는 식의, 뭐라 반박하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학생인권조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언론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학생과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청소년)인권을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운동사회 내에서도)잘 들리지 않았던 얘기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위치에 세워두고 있는지, 청소년을 어떤 주체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 이야기거리들을 수면 위로 띄우는 작업입니다. “학생/청소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류의 청소년 ‘존재’에 대한 그 견고하고 딱딱한 ‘전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그 동안의 청소년 운동이 좀 더 힘을 받고, 그 힘을 밑거름 삼아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발제 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과 과제 : 김재석(전교조서울지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방향과 과제

김재석(전교조 서울지부)

들어가며

서울의 신임 궡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 달 8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작성한 뒤 검토를 거쳐 내년 4월 쯤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0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이던 궡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선 궡 교육감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약속 이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면서 계획대로 학생인권 조례가 순조롭게 제정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해서 학생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나 이번 궡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발표 이후 바로 많은 이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뒤 따른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교육관, 학생관과 같은 가치관의 차이에서부터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얹히면서 추진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오늘 발족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이런 이견과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내는 장을 만들고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내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다. 학생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고, 학부모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위한 활동이 서울운동본부의 역할인데 바로 이것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기본 방향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입장이 다른 단체와 토론하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동네를 찾아다니며 단 몇 명의 학부모들이라도 즐겨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을 만들어 학생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궡노현 교육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 인권교육감으로서 우리 교육을 성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감시하고 때론 견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분명히 한다.

I. 조례제정 운동의 방향

첫째, 서울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각계 각층 서울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대중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심을 갖고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의 학창시절의 위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경쟁적 입시체제와 대학서열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례제정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거나 광범위한 청원 입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양한 단체와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토론하면서 서울시민을 주체로 하여 학생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조례제정운동에서 청소년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의 자유와 학습과 복지 등에 관한 문제로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주인인 학생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주체로 참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학생 단체나 청소년인권운동 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학부모, 교사 및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광범위하게 연대한다.

셋째, 교사가 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학교가 학생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당하는 곳이란 사실은 역설적으로 학교가 학생 인권 신장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학교의 교사가 학생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존중받는 학생이 그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고, 국가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때 교사의 교육권(노동권) 또한 그만큼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과 자신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 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활동주체로 나서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 자체를 이 운동의 중심에 놓되 동시에 학생 인권에 대한 광범위

한 교육-토론-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한편,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 3주체 및 사회가 학생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운동을 계기로 간담회, 토론회, 교육선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다섯째,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신체적·직접적인 인권 신장을 중심 목표로 하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도 함께 추진한다. 즉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복장 자유화, 학생회 활성화 및 학내외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은 일제고사 및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협력교육실현, 궁극적으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배움의 권리 보장 등과 병행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중적 조례제정운동을 서울에서 선도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상대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많은 서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례제정운동의 정보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특히 신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시도에서는 대중적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에서의 운동 방식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곱째, 서울운동본부는 교육청과 병행하여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8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운동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운동본부는 주민 발의나 주민 청원이나 어떤 형태로든 서울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본부는 자체 조례안을 만들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등 조례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운동본부가 만든 조례안과 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함께 검토되어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발의될 수도 있고, 각각 발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우선 각각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더 힘 있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흔쾌히 협조하고 함께할 것이다.

II. 조례 제정 운동의 과제

1. 조례제정 방식

1) 조례제정 방식

- ☐ 의원 발의 : 10명 이상 의원 공동 발의
- ☐ 집행부(시장) 발의1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발의권
- ☐ 집행부(교육감) 발의2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발의권
- ☐ 주민 발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광역 시도의 경우)의 연서에 의해 청구(서울은 81,885명 이상-2010.1.1 기준) * 지방자치법 15조 ‘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에 근거
- ☐ 주민 청원 : 시의회(1명 이상의 시의원 소개), 시장, 교육감에게 1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명하여 청원

2) 주민 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 의의

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과 지역 주민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례 제정이 주민 발의자들의 자기 요구의 산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이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

② 조례 제정을 강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③ 조례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청구시 조례안을 주민 발의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시장(교육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로 시의회에 부의(다만 조례안에 대해 의견은 제시 가능)

-시의회(교육위원회)의 공식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제시

-청구인으로서 수시 의견 제시 가능

④ 학생 인권의 사회적 이슈화가 보다 쉽다.

-주민 서명자 조직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관심 확대

와 사회적 이슈화 용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기자회견이나 집회, 거리에서의 서명 및 선전 홍보 등을 통해 언론의 조명 가능성 확대

⑤ 지역 시민사회운동 및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활성화에 기여한다.

-학생 인권 운동이라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운동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운동을 결속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⑥ 정치권 및 행정 관료에 대한 시민 통제의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정치·행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⑦ 집행부(시장이나 교육감)와 의회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조례가 찬반이 분분하거나 의견이 다양한 경우 조례 제정에 서명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조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 문제점

① 주민 발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구인 서명 조직이 쉽지 않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 노출로 서명 꺼리는 경향

-남발을 막고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수의 청구인 필요성 인정하나 대중 운동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실거주 주소를 제대로 기록한 8만여 명의 서명은 부담되는 숫자

② 많은 인원과 예산이 소요된다.

-서명 조직하고 이슈화에 많은 비용 소요

-자발적이고 소규모 단체 중심인 시민운동에 큰 부담

③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청원 입법 시에는 청소년도 청원 서명 가능

-주민 발의 시에는 청구인 되지 못함으로써 소외될 수 있음

④ 조례 제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청구서 접수에서 시작하여 6개월간 서명 조직한 뒤 시청에 제출하면 청구 수리여부를 심의하여 시의회에 부의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된다.

※ 주민 발의시 시의회(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의회는 누가 발의했느냐에 관계없이 조례안 심의하여 변경 가능하므로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우리의 경우 10만 주민 발의의 힘과 교육청과의 공조가 위력을 발휘할 것임

3) 주민 발의와 주민 청원 비교

구분	주민 발의	주민 청원
대상	시의회	시의회, 시장, 교육감
요건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한 수	모든 주민 1명 이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서명 조직에 대한 목표의식이 강하다. • 조례 제정 및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 •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 시민 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인 숫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 • 인원과 예산이 적게 들어 간다. • 19세 미만도 청원할 수 있다. • 조례 제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인 조직에 많은 인원과 예산 필요 • 19세 미만은 발의자로 참가 불가 • 조례 제정 기간이 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및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 • 서명 조직에 대한 목표의식이 약하다. • 여론 조성의 힘이 약하다.

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서 청소년의 역할

-주민 발의시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 주체로 참여하여 조례안 작성, 선전 홍보 및 청구인 조직 과정에 의견을 내고 실천에 직접 참여한다.(cf. 교육감 발의인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학생참여기획단으로 참여)

-조례제정운동본부에 단체, 지역 외에 청소년 추진단(가칭)을 두어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다.

-청소년 추진단(가칭)은 의견 수렴(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학생인권침해사례 수집 등), 선전 홍보(온라인 토론방 운영, 캠페인 활동 전개, 토론회, 집회 등), 서명 조직(거리 서명, 가정 서명 등) 등을 할 수 있다.

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서 교사의 역할 (주민 발의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교육 체제와 경쟁 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교사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 침해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훼손하고 있다. 결국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침해의 상당한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적 교육관이 원인일 수도 있고 억압적 교육체제의 피해자인 교사가 그 억압을 학생에게로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인권권에 대해 성찰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신의 존재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 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 교사에게 그런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적당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식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발의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청구인 조직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 서명을 받으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새삼 눈을 뜨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 발의 방식이 교사에게 학생인권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방식이다.

4.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관계

① 광노현 교육감은 조례 제정 일정 제시 외에도 취임 이후 새로운 학생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자문기구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② 서울운동본부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학생인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관계

-운동본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각각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 조례제정이 주민발의일 경우

- 운동본부는 조례 청구인 명부와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은 주민 발의안에 대해 입장 제시하여 교육위원회에 부의
- 서울시 교육청안은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부의

-운동본부 조례제정이 주민청원의 경우

- 운동본부는 청원인 명단과 함께 조례 청원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은 청원안을 반영하여 교육감안을 교육위원회에 부의

④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 수렴 과정 공조 가능

5. 서울운동본부의 구성 및 활동(시안으로서 이후 서울운동본부에서 논의 후 결정)

1) 서울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

-서울운동본부는 인권, 청소년, 학부모, 교사 단체 등 제시민노동사회 단체가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 학생인권신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진지로서 서울에서의 선도적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서울운동본부는 각종 조사, 선전홍보, 정책연구, 조직 활동, 학생인권사안 대응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종합적 운동을 전개한다.

-서울운동본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신장 사업에 협조하는 한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2) 서울운동본부의 구성

□ 참가 단체 조직

① 7월 5일 현재 참가 단체 : 33개 단체

공공노조학교비정규직분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② 참가 단체 추가 조직

-서울운동본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에서부터 서명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까지 참가 단체를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25개 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운동본부 구성을 감안하여 지역 조직이 있는 단체들의 가입을 적극 조직한다.

-지역본부 구성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시민노동사회단체를 적극 발굴 조직한다.

□ 운동본부 구성

① 공동대표 : 청소년, 인권, 학부모, 교사, 시민, 노동 등의 부문별 대표로 구성

② 집행위원 : 운동본부 활동 전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실무력이 있는 활동가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기획, 조직, 선전홍보, 조례작성, 총무, 카페관리 등)로 역할 분담하고 팀장 선정

③ 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 대상 특화된 사업 추진체, 위원장은 서울운동본부 공동대표 겸함, 지역 본부에도 설치

□ 운동본부 운영

① 회의 체계

-대표자 회의 : 공동 대표, 각단체 대표, 지역운동본부 대표/중요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 개최

-집행위원 회의 : 집행위원 전체 회의/각종 활동 계획 수립, 집행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격주 등 정기적으로 개최

-팀별 회의 : 팀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② 분담금

- 단체별 조건에 따라 월별 등 정기적으로 분담금 납부
- 사업시 필요 예산을 단체별 조건에 따라 분담
- 첫째를 최소로 해서 가입 단체 모두 분담하고 둘째와 결합

□ 지역운동본부 구성

- ① 서울시 25개 구청에 지역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회 편제에 따라 동부, 북부, 성북, 중서부, 강서, 남부, 관동, 강남, 강송 등 9개로 구성하는 방안 / 11개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하는 방안 등
- ② 지역 조직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참학, 평학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본부 구성,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계속 참가 요청
- ③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참가 조직

3) 서울운동본부 활동 계획(안)

◆ 기본 계획(조례제정 방식에 관계없이 추진할 사업)

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 지역 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7월 중순부터 지역 토론회 추진
-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내용 및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운동 추진 논의
- 전교조, 민주노총, 학부모단체 등이 준비 단체가 되어 추진하고 서울운동본부에서 자료 및 강사 등 지원

②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조례제정 관련 설문조사

- 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작업 및 조례제정의 기본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월에 추진
- 실태조사는 교육청에 협조 요청/설문조사는 초중고생 대상으로 표집 실시

③ 청소년 인권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학생인권 신장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접근 외에 구조적,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모색하고, 학교 안팎의 학생인권문제 및 학생을 넘어서 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을 학술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행사 개최
- 10월에 교육청과 공동 개최 모색

④ 학생인권조례제정-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 개최

- 수능시험 직후 3회째 개최되어 온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위한 문화제에 학생인권조

례제정도 포함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필요악으로 수용케 만드는 극도의 입시 경쟁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인권신장의 길임을 여론화

□ 범국민교육연대 등 학부모*교사단체와 공동으로 개최

◆ 주민발의 조례제정 추진 계획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경우)

① 조례안 작성

□ 운동본부 내에 인권활동가, 청소년,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조례안 작성팀을 구성한다.

□ 경기도, 광주, 경남 등 기존 조례안을 참고, 서울 조례안을 작성하여 내부 토론회를 거친다.

□ 8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교육청에 제출한다.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거듭하여 청구인 명부 제출시 최종 제출한다.

② 서명운동 전개

□ 서명 운동 절차(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뒤에 첨부)

-청구 대표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서명 시작

-이 때 대표자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위임하여 서명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서명을 위임 받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여 자격을 획득한다.

□ 서명 조직 목표

-서울시에서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수는 81,885명(2010.1.1 기준)이나 무효 등을 고려 12만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을 조직하고, 유효 청구인 수를 10만 이상으로 하여 19세 이상 서울 주민 '10만명이 청구안 조례안'이라는 무게를 갖도록 한다.

□ 운동 본부내 팀별 역할 분담

○ 기획팀

-서명을 받기 위한 토대 구축 사업인 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

-서명을 독려하고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특별 행사(서명선포대회,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등) 기획하여 추진

○ 선전홍보팀

-학생인권 및 조례제정운동에 대한 활동가용 자료집 제작

-서명을 받기 위한 선단지 제작

-단체 및 지역을 방문하여 학생인권 및 조례제정운동 선전홍보 계획 수립 및 강사 파견

-언론 대응 및 온라인에서 선전 홍보 활동

○ 조직팀

- 단체팀, 지역팀으로 역할 분담
- 단체별, 지역별 서명 목표 설정하고 점검
- 서명지, 선전지 배포 및 서명지 수합 정리 보관
- 서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단체 발굴

○ 조례안 작성팀

- 조례안 계속 보완
- 서명 기간중에는 다른 팀 지원

○ 카페 관리팀

- 운동본부내 소통

○ 총무팀

- 각종 행사, 선전물 제작 등을 위한 분담금 수합

○ 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 대상 행사 : 설문조사, 청소년 난장, 선전홍보물제작 배포 등
- 거리 및 집회·행사장 서명

□ 서명 조직 및 서명지 수합 방안

- 단체별, 지역별로 자체 서명 목표를 정하고 선전홍보를 통해 서명을 추진한다.
- 거리 및 행사장 서명은 단체별, 지역별로 일정한 횟수를 실시하되, 선전홍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
- 서명자가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인쇄한 서명지와 선전지를 배포(우송)하고, 대부분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명지와 선전지를 직접 복사하여 사용토록 한다.
- 서명한 서명지는 원본을 직접 또는 우송을 통해 서울운동본부에서 수합한다. 다만 직접 수합하는 경우 지역본부에서 일차 수합하여 서울운동본부로 전달해도 된다.

□ 선전 홍보 방안

- 서울운동본부의 공청회나 토론회 및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활동가(수임인) 대상 선전 홍보 : 활동가(수임인)용 선전홍보 자료 제작 활용
- 단체별, 지역별 방문 선전 홍보
- 언론 보도 의뢰,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전 홍보
-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전지나 다양한 선전물 제작 활용
- 서명 선포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선전 홍보

□ 구체 사업 일정

○ 7월~8월 : 준비기

- 서울운동본부 발족

- 활동계획 수립
-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
- 대표자 증명서 교부, 교육청 조례제정 취지 공표
- 수임인 조직 신고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지역순회토론회 및 지역운동본부 구성
- 단체 방문 선전 홍보

○ 9월~12월말 : 본격적인 서명 운동기

- 각 단체, 학교 및 가정, 거리에서 본격적인 서명 운동
- 지역순회토론회 및 지역운동본부 구성 계속
- 각 단체 방문 선전 홍보 및 서명 조직
- 거리,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단체별, 지역별로 일정한 횟수를 정해 선전 홍보 및 서명 조직
- 언론 보도·기획기사 조직,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선전 홍보
- 9월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조례제정 관련 설문조사하여 기자회견
- 10월 청소년 인권 신장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10월 중순 서명 5만 돌파 기념 행사
- 11월 학생인권조례제정-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 개최
- 필요시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등 배치

○ 12월 말~1월 : 서명운동 정리 및 청구 시기

- 서명지를 정리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청구
- 조례안 최종안도 서울시 교육청에 함께 제출
- 서울시 교육청과 조례안 협의하여 단일안 작성한 뒤 최단 시간내에 교육위에 부의

「참고자료」 - <조례제정절차>

주민발의는 이렇게!

※ 주민발의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은(중간 생략)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서울의 경우 81,88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1단계 : 조례안의 작성과 청구 대표자의 선정

- 청구대표자를 선정
- 서명 전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할 내용을 확정해서 조례 제·개정청구
-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조례의 주요골자와 제·개정이유 정리



◎ 2단계 : 청구서의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

-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그리고 청구서 제출 시에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 3단계 : 수임인의 선정 및 신고

-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취지를 공표한 이후 곧바로 서명을 시작
- 서명요청 기간 : 서명요청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광역 시·도는 6개월, 시·군·자치구는 3개월.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음
- 수임인 선정 :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19세 이상 성인, 해당지역 거주자)



◎ 4단계 : 서명운동

- 청구인 명부에 19세 이상의 주민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청구인 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5단계 : 청구인 명부의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



◎ 6단계 :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청구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 명부 접수 후 7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 해당 조례가 조례 제·개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수리하여 대표자에게 통지



◎ 7단계 : 조례(안)의 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 때 단체장의 의견제시 가능

- 의회 심의하여 의결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

- 가결되면 조례공포, 시행, 부결시 재심신청, 대법 소송

*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에 제출되었던 문건 및 논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토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 하승수(전 제주법대 교수)

토 론 문

하승수(변호사)

1. 학생인권은 국제적인 인권규범인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도 인간인 이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조약인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도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왜 보장하느냐?는 식의 논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명화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교육법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정치적 색깔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일 뿐이며,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제조약과 헌법, 교육법의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법규범인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서, 보다 가까운 규범, 보다 구체성있는 규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생과 성인들에게 보다 가까우면서도 구체적인 법규범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동안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지역이나 학교, 또는 학급차원에서 교사, 부모,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도하거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아동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 제도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조례를 통해 이런 활동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노력들이 확산되고 안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의 인권이 실제로 위협받거나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침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지역 내의 여러 기관, 시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 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학생의 참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청소년 참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규모 등으로 인해 실효성있는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례를 통해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들에는 국제조약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현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쉼 권리를 박탈하게 될 수 있는 과도한 0교시 수업의 제한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기준이나 제한 근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물론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당혹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잘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을 때에만, 학교폭력, 따돌림,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3. 이처럼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8년 1월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종합적인 조례가 제정되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4.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있는 구제장치를 두는 것이다.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아동인권 침해 구제기구와 관련해서는 아동인권에 관한 옴부즈만(옴부즈퍼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옴부즈만은 업무관할 범위에 따라 일반옴부즈만과 전문옴부즈만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옴부즈만은 특정한 분야 또는 특정한 기관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옴부즈만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전문옴부즈만 중 하나가 아동옴부즈만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1996년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아동을 위한 유럽의 전략”을 통해 아동을 위한 커미셔너(옴부즈만)의 임명이나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을 제안했다. 그 이후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었다. ENOC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24개국 32개 기구가 가입해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임기 6년의 아동옴부즈만이 설치되어 있고, 핀란드의 경우에도 임기 5년의 아동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ENOC에 따르면 아동옴부즈만은 독립성(Independence), 명확한 관할권과 적절한 권한(defined jurisdiction and adequate powers), 접근성(Accessibility), 협력(co-operation), 운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아동인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이유는 * 아동인권의 특성상 아동인권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 관료기구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이런 아동옴부즈만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되기도 하지만, 지방차원에서도 설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8개 지방에서 아동옹호관 또는 아동옴부즈만(children's advocate/ombudsman)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 미시간의 주의 경우에는 1994년에 제정된 아동옴부즈만법(The Children's Ombudsman Act)에 의해 아동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에 각각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를 설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 「가와니시시 아동인권 옴부즈퍼슨조례」에서는 아동옴부즈퍼슨을 아동 고유의 상담·구제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 이익의 옹호자”, “대변자”, “공적 양심을 환기시키는 사람”으로 위치지우고 있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직무는 아동의 권리구제, 권리침해의 방지,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제언 등이다.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 대신에 ‘권리옹호위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일본에서 종합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중 하나인 타지미(多治見)시의 경우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아동권리옹호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가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나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정 이후에 옴부즈만, 옴부즈퍼슨, 커미셔너, 권리옹호위원 등의 이름으로 아동인권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내에는 반드시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상담,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조치기능, 제도개선 권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

담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의 권리 기준을 조례에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독립성이 보장된 학생인권 구제기구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칭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 학생인권침해 및 예방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 * 관련기관과의 협의·조정 * 학생인권실태조사 * 연차 보고서 발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의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태가 매우 악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독임제 형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토론]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가?

토론자 조영선 (경인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더니, 교권을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학생인권이 아이들을 망칠까?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두려워하는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등한 개념이 아니다.

학생인권은 원래 존재했던 말이 아니기에 어원을 가릴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Human rights for students' 정도일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교권'을 찾아보면

교권 [敎權, educational authority]

right가 아니라 authority, 즉 교육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할 '권위'

즉 교권은 교육의 유일한 주체가 '학교'이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던 시절, 학교가 학생들에게 내세웠던 권위를 뜻하던 말이었다.

따라서 학생에게 인권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교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두 '권'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학생인권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존재의 인권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 교권은 학생을 대상화했던 구시대적 권위 의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가?

교권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살피기 위해 교총과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교총] 2001~2008년도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 분 문 제	20	13	17	26	28	13	28	18
학교안전사고	11	37	28	51	42	33	46	59
학부모 부당행위	12	19	32	40	52	89	79	92
명예훼손	29	9	5	17	8	20	15	27
교직원간 갈등	기타에 포함	25	10	24	14	24	30	38
기 타	32	12	3	33	34	.	6	15
계	104	115	95	191	178	179	204	249

교총자료의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현황에서 교권침해의 주원인은 ‘신분문제’였고, 학교 현실을 비추어볼 때 교사의 신분을 관할하는 교육청과 사립학교 당국이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증가한 것은 학교 안전 문제와 연관된 사안으로 학생의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학생의 피해에 대해 학부모가 대신 나서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

구분	항 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학생지도, 교육주체간의 갈등, 학교시설관련 업무	학생지도(체벌,분실,안전 공제,전학)	12	18	18	7	4	1
	학교폭력,성폭행				5	2	1
	평가(학생관련)	3	4	2		1	
	학부모 갈등				8	7	
	관리자 갈등	23	18	13	30	14	3
	교육청 갈등			1	3	1	
	학교시설물 관련	1	4	3	1	2	1
휴가, 휴직	유학,동반연수,간병휴직	14	8	6	14	12	5
	출산휴가,육아휴직	11	10	10	18	16	11
	병가, 병휴직	10	5	8	8	6	8
	연가(해외연수,여행),보건	6	8	6	5	15	6
	휴가,특별휴가,조퇴						
봉급, 수당, 호봉, 장비 관련	출장비,시간외수당	7	10	4	9	2	3
	봉급,수당계산,호봉정정, 경력	6	4	2	7	3	5
	성과급반납, 평가불만		4	5	2		
	이전비	4	1	1	1		
	연금관련			1			
복무, 징계, 임용, 인사관련	복무,근무,근평문제	8	8	4	3	15	7
	징계(일제고사포함)	4	1	5	3	1	
	임용(전과,폐과포함)	2	2	1	1	1	
	인사관련	3		1		2	
단협, 조합내갈등 교원평가	단협관련	2	2	4			
	지부,지회와 갈등	1	2				
	조합원, 교사간 불화		3		1	2	
	교원평가		2		1		
기간제	기간제 계약, 고충		3	4	3	10	1
기타	기타	9	12	2	14	20	3
계							

전교조의 자료에서도 교권침해의 원인은 ‘관리자 갈등’과 ‘휴직’과 관련된 노동 조건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오히려 언론에서 떠드는 학생 생활지도 상의 갈등은 교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침해’는 이미 침해할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 아직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는 교권을 ‘침해’할 권력이 없다. 물론 언론에 회자되는 욕설과 폭력도 교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임에 틀림없지만 대부분 그런 사건의 경우 학생의 전학이나 퇴학 등으로 마무리된다. 즉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한도 통로도 없다. 그래서 쌓인 억울함이 폭력적인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온전히 자기 책임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 떠드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만 같은 ‘교권’의 현실은 위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반항에 의해 실추되어 온 것 같은 ‘교권’은 사실 책임소재도 모호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시스템이 뒷받침해줘야 할 학교안전사고, 관리자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외시한 채 학생 안전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현실, 학생들과 맞지 않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 위주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야 하는 현실이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억압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저항은 교사 개인에 대한 분노로 폭력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떠나 법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의 권한은 더 열악하다.

교육할 권리 중 핵심인 교육과정은 국가의 권한으로 고정되어있고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 교육과정에 비해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교사의 재량이 반영될 영역이 부족하다) 교재의 선택, 결정권 역시 검·인정 교과용도서 사용으로 제한되어있다. 1)최근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

·인정 교과서의 사용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내용 및 방법결정권도 소극적으로 보장되어있고 성적의 평가권도 그나마 일제고사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보장되던 것이 학생지도 및 징계권인데 이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원칙을 가지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교원의 의무를 보면 더 왜소해진다. 복종, 직무 전념, 친절, 품위 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교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로 가득차 있으려니와 정치 활동 금지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의 의무까지 -이러한 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위배된다.²⁾

요즘의 교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실제로 요즘 교사들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을 억압하거나 학생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교육자로 설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즉, 교육적 보람도 없고 실효도 없는 일거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일제고사를 보고 학생들의 떨어지는 학

1) 이미 검인정을 통과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교원의 권리·의무

구분	내용
1. 교원의 권리	1.1 교육할 권리 ①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 국가의 권한 ② 교재의 선택·결정권 : 검·인정 교과용 도서 사용 ③ 교육내용 및 방법결정권 : 초·중등학교 소극적 보장 ④ 성적의 평가권 : 객관적·중립적 기준에 의해 실시 ⑤ 학생지도 및 징계권*
	1.2 신분상의 권리 ① 신분 및 직위보유권* ② 직무집행권* ③ 재심청구 및 행정정송권 : 교원징계재심제도 ④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⑤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⑥ 불체포특권* ⑦ 처분사유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⑧ 여교원의 동등신분 보장권* ⑨ 교원의 단체결성과 교섭협의권 및 노동조합결성권 —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권 ⑩ 교원의 정치활동 : 대학교수예외적 허용
	1.3 재산상의 권리 ① 보수청구권 ② 연금청구권 ③ 실비반상청구권 :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비용
2. 교원의 의무	2.1 성실의무 부여된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의무
	2.2 직무상의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직무전념의무 — 직장이탈금지 의무 — 영리 및 겸직금지 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2.3 신분상의 의무 ① 비밀엄수의무 ② 청렴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영예 등의 제한 ⑤ 정치활동 금지 의무 ⑥ 집단행위 금지 의무

업성취도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과후 학습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퇴근 시간을 뒤로 하고 남지만, 실제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미 전국 몇 만등 아래인 ‘미달’ 학생이라는 낙인감에 젖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수업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당근이 필요하다 싶어 간식을 사줘보기도 하지만, 간식만 먹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팬찮은 아이가 있어야 보고 배우는 것도 있을 텐데 비슷비슷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모여 우리가 열패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서로 확인해야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근도 안통하면 때려서 억지로라도 남겨야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강제 방과후 수업인가? 학생인권조례인가?

#우리 시대의 학생과 사회, 어느 것이 더 미성숙한가?

흔히 학생들은 권리를 보장받기에는 너무 미성숙하고 책임의식이 없다고 한다.

우리 시민 사회는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성숙해왔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상호 존중에 의한 갈등해결, 다양성의 추구를 실현해왔다. 그런데 미래를 기르는 교육의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제한하는 구태가 유지되고 있다.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그 미성숙은 무엇을 통해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 역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고민 속에서 시민혁명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적 사회로 성숙될 수 있었다. 우리 사회 역시 5.18 민주화 운동, 87년 노동자대투쟁 등 많은 역사적 경험들 속에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학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많은 유의미한 시도들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는 유의미한 경험들을 전파할 수 있는 시도의 기회를 박탈하고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사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학생들의 시도와 사고의 확장을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봤을 때, 학생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미성숙함을 걱정해야되는 대상이 과연 학생들이나?

#학생인권조례에 기대하는바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된 교육의 권위를 세우는 바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합리적인 권한 사용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폭력을 동반한 권위주의에 반발해왔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교의 지도에 반항해왔던 이유는 학생지도 방식이 교사나 학교에 따라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학생들의 많은 반발을 사왔던 두발 지도의 기준은 ‘학생답게’였고 체벌의 기준은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였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속에 진행되어온 학생 지도는 지도의 권위를 잃고 폭력만이 남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반항하여 전반적으로 지도를 거부하여 반항하거나 태업하는 형태로 저항해왔던 것이다. 즉 불합리한 지도 관행에 발목을 잡혀 정말 필요한 권위 조차 짓밟히게 된 상황인 것이다.³⁾

두발 지도의 근본은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체벌의 근본 역시 ‘잘못이 있다면’ 폭력으로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입시 지도의 근본은 ‘나를 위해 남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질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힘센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체벌로 다스리듯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약한 선생님의 잘못을 폭행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 수업 정도는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기 때문에 딴짓과 태업을 일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약한 대상에게 분풀이 하기’, ‘나서서 말하다가 혼나기 보다는 조용히 태업하기’ 등으로 왜곡되어왔던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제도에 대한 분노를, 사회에 대한 분노를 교사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시켜왔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사회화하고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라도 이제는 명분이 설 수 있다. 학교가 아니 사회가 이 정도로 미성숙한 너희들을 존중하는 데 너희는 왜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냐고 말이다.

둘째, 학생인권 조례는 진정한 상호 존중 교육과 평화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로서 존중받아야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동력이 되어 교사의 제한된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려고 하다보면

3) 불합리한 지도 관행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낳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과 태업이 이것은 ‘학교붕괴’라는 방식으로 언론에 회자되었다.

학생의 진정한 ‘동의’없이 무엇을 교육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안할 수 밖에 없고 교육과정이 아닌 서로가 참여하는 교육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그 의미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시 위주, 지식 교과 위주의 교육 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권한을 진정으로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제시된 교원의 의무 중 ‘정치적 중립’은 그 의미가 우리 나라에서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지만⁴⁾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선택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펼칠 수 있다면 교사의 개인적 견해는 그야말로 여러 정치적 의견들 중 하나의 의견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은 문화적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행동=폭력’이라는 도식적인 사고 속에서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적인 폭력은 용인하면서 공적인 문제제기를 막는 결과를 낳아 학교 폭력과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학교 사회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의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도 교사의 단체 행동도 ‘아이들을 버린 행동’이 아니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학교를 감옥, 학생을 죄수라 비유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간수에 해당할 것이다.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가 죄수와 간수가 아닌 인간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감옥이었던 학교도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 실제 다른 나라에서 원래 쟁점이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든 그 권력의 외압에 관계없이 교육은 그 본래의 모습대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거꾸로 권력이 교사 개인의 소신을 짓밟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토론] 학생 참여 방안 :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학생 참여 방안

김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모임)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는 친구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혹 머리가 길다고 따귀를 맞지는 않을까, 또 이어폰을 끼고 등교하다 압수를 당하지는 않을까, 캐릭터 양말을 신었다고 생활지도에 걸리진 않을까 하며 등교하는 학교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교문은 신기한 장소입니다. 들어서면 순간 학생들의 인권은 멈추고 21세기는 20세기로 되 돌아갑니다. 그 신기한 장소가 다른 방향으로 신기할 수는 없을까요? 들어서면 순간 내가 존중받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회시간에 우리들은 배웁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고. 그것은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헌법도 천부인권설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면서도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인데 학생이란 이유로 인권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과연 현실은 어떠하길래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을 신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양말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양말을 신으면 복장불량으로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잉체벌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접하기도 합니다. 등교 길에 규정보다 머리카락 길이가 몇 센치 더 길다고 해서 따귀를 맞는 친구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종교를 믿지 왜 양말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종교수업을 듣고 종교 의식을 행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한 교칙을 만들자는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에게 출마하지 못한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들으셨듯이 우리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인권을 침해당합니다.

교육청에서, 인권위에서 구제 받으려고 해도 운이 좋아야 잠깐 상황이 나아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매번 교육청에 신고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기에도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고 그렇게나마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해들 더 이상 받지 않게,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도 해

준다고 하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요.

학생들은 더 이상 부조리한 현실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인권조례에 큰 희망을 걸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원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좀 살아 보자고 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들에게 귀 기울여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교육청 발의의 조례가 되어도, 시민발의 조례가 되어도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조례에 대한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동시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등과 협력하여 인권에 대한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를 참모하여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권조례 소식지의 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신고, 인권조례에 대한 글을 쓸 학생기자들을 모집해, 학교생활에서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학생들 여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의 학생인권의 전망은 어떤지 등의 이야기를 학생들 스스로가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 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럼 우리 학생들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고무된 마음으로 조례에 대해 서로 토론할 것이고 집에 가서 조례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풍경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홍보대사들을 위촉해 학생들 스스로가 조례에 대해 홍보한다면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움직임입니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또 단체들이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 나서서 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단체들에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조례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모여서 교육청 앞에서 요구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릴레이로 글을 남기기도 해야 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이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 조례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어른들의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동본부에 참여해 조례에 대한 서명운동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블로그에 조례에 대한 기사를 스

크랩해서 더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들 스스로가 조례에 대한 정보들을 더 자주 접하고 생각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왜 조례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까지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우리들의 열망을 자발적 참여로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조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또 조례 제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교육청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뽐어내야 합니다. 주변에 조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설명해줘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조례를 향한 우리들의 관심과 염원이 커질수록 조례는 더욱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그리하여 당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주인공이 되어보았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층의 촛불홍위병 설과 조례 반대 목소리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조례의 집회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시며 날 선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학생들을 한 없이 무시하시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가치 판단을 할 뿐이지 조례에서 집회 참여를 보장한다 해서 특정인 및 단체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7월 2일자 사설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일간지가 학생들을 자제력 없고 스스로의 문제인 교육정책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깎아내리다니요,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적용받는 교육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 그와 논조를 같이 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조례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들 기본권 문제를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정치쟁점화 시키고 이념논쟁으로 만들고 계시는 여러분 스스로 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에서 인권조례를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제정되어 학생들이 억압에 침묵하며 울분을 삭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멈추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강혜승 (참학서울지부)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조례

강혜승(참교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장)

들어가며.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의 기본적 권리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권’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우리의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학생들도 한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우선 학생이기에 학교의 생활지도 규범이라는 규칙의 틀 속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이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후 더욱더 가속화된 경쟁교육은 학생들을 더욱더 옥죄고 있다. 한 예로 고등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이어지는 장시간의 학습은 교육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학습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 하에 학생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꿈 꿀 시간조차 빼앗긴 학생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 학부모들이 그들이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 만든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은 그들을 옥죄는 사슬 속에서 그저 어른들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관념을 바꿔야 할 때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가 만들어낸 엄격한 규제와 규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찌할 도리없이 순응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많은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의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 경상남도에서는 여러 단체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나의 문제이며 내 자녀의 문제이다. 남의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 자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새싹들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학생인권이라는 문제를 주의깊게 여기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 인권 상담 사례(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 전화 상담 / 사이버 상담 / 면접 상담 / 민원 상담-

초등학교 /학년 아이의 엄마이다.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30센티미터 자로 머리카락이나 손을 때린다. 이 교사는 내년엔 정년을 앞둔 교사이다. 5년 전에 암수술을 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우라질, 네 머리를 쪼개 머리깎자” 등의 말을 하니 아이들이 공포감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걸상을 두고 있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교직원생활 중에 올해 아이들이 제일 힘들다고도 한다. 피해망상증세도 있는 것 같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나를 감시한다, 학교 경비들도 나를 감시한다 등의 말도 한다. 이전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로 경고 비슷한 조치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싶어도 내년 9월에 정년퇴임할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는 식이다. 체벌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사가 하는 이런 종류의 행동은 체벌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 어떻게 하면 이 교사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 2 :두발규제에 관한 상담입니다.

조카가 사립 OO고 2학년 남학생인데 학기초 머리가 길다고 등교시간에 뺏을 맞고 벌을 서고 앓는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창 옷이나 머리에 신경 쓸 때 아닌가. 그런 것 가지고 벌을 선다는 게 기가 막히고, 부부교사인 조카 부모도 속상해한다. 부모는 각각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 학교 두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잘 안되더라고 한다. 부모가 직접 나서기는 힘들어해서 대신 내가 상담한다. 다른 아이도 한번 걸렸는데 반발을 했더니 바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단다. 교장과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학생회도 없나? 아이들 의견은 전달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학교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상담내용 3 : 심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학생부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를 전학가라고

나의 아이는 고3이다. 교사들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하여 아이가 위경련을 일으킬 정도이다. 물론 우리 아이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고 말대꾸도 잘한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맞대응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

상담내용 4 : 벌점제로 전학을 강요하는 학교

우리 둘째 아이는 00고교 1학년이다. 첫째 아이도 이 학교 3학년이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학교에 도난 사건이 생겼다. 학교장이 순시 중 쪽문으로 나가는 타 학교 학생을 목격한 뒤에 생긴 일이다. 이 학생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를 포함한 두 명이 학생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중략) 이 학교는 자사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칙이 매우래서하다. 옹해부터는 더욱래서격 해졌다. 휴대폰을 소지하면 3점, 무단결석 5점, 무단결과 3점, 머리 길이 1점 등 매우래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1이 115점이 이상이면 교내봉사, 25점 이상은 사회봉사. 40점 이상은 특별봉사, 50점 이상은 전학권고, 60점 이상은 퇴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벌점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삭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벌점을 준 교사가 선행을 한 학생에게 삭감이 1 주는 것이다. 수 다 보니 교사의 주관적 해석 1따라 삭감이 정해진다. 마음 1드는 학생에게는 유리창이 닦으라고 시킨 후 삭감을 시켜주는 반면, 교사에게 밉보인 학생은 삭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고 학생생활규정이나 학생자치활동등 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은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인권신장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학칙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매 맞지 않을 권리, 개성대로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밤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각종 규정과 학생인권의식이 미성숙한 학교 관계자 때문에 학교의 체벌이나 징계, 강제 두발 단속으로 철저히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따라서 타인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해칠 수 없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초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상벌점제, 학생자치활동 등을 상위법의 제도적 근거에 따라 제·개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신장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적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두발규제, 학생 통신권 제한, 상벌점제도,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결정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하여 미성숙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 안은 무거운 규칙으로 묶인 따분하고 지루한공간이다. 입시라는 목적아래에서 시행되는 무자비 할 정도로 인간미 없는 규칙들은 이미 학교라는 공간을 그저 공부만을 강요하는 대규모의 학원으로 바뀌 버린 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더욱 강화된 경쟁이라는 교육의 지향점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이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거둬드는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친구라는 존재를 발판으로 또 자신이라는 존재를 학생이 아닌 일등으로 만들기 위해 본래 자신이 가진 개성과 가져야할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나는 라디오를 통해 어떤 노래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랩이었다. 개인적으로 랩이라는 장르에 그리 흥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웬지 마음이 이끌려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랫말에 질려버려 채널을 돌리려고 마음먹은 순간 노래가사의 한 구절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잘 기억나진 않았지만 이런 가사였던 것 같다.

“학교에선 못 배워 학교에선 뭘 배워 학교에서는 딴 걸 배워 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방법 남들과 똑같아지는 방법 적당히 거짓말하는 방법 폭력에 익숙해지는 방법”

노래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학습의 악습적인 관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노랫말은 지금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 나는 10여년 전 유행했던 서태지의 교실이데아가 떠올라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악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바꾸었는가?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노랫말속의 가사처럼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학교 안에서 빼뺏어진 사회의 규칙들을 학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위 앞의 가위라 할지라도 잘못된 편견과 편협된 의견은 언젠가 진실의 검에 의해 깨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10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희망의 물감으로 덧칠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안이 이러한 모순된 시대상을 꿰뚫어 낸 창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학생인권조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어른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해왔다. 이런 모든 실패는 우리스스로가 책임지고 고쳐내야 한다. 우리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수많은 날들과 그 날들과 함께할 교육의 현장이 앞으로는 희망과 웃음으로 뒤덮여 그 안에서 학생들의 꿈과 이상이 맘껏 만개하길 바란다.

[토론] 지역 추진 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광주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위 활동 성과와 추진과정 속에서 둘러싼 논쟁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박고형준

○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 활동 성과

1) 1차 시기

광주학생생활연구회는 지난 2003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을 포함하여 수 년 동안 학생들의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학급자치활동과 문화 및 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들을 시도하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외화의 방안이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사회단체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고, 부분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지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지역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와 결과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2004년 이후로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중, 2005년 한 교육위원(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자)이 인권조례 제정을 염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드디어 조례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 단체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서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 광주홍사단, 광주YMCA, 광주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 준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를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조례제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여회에 걸친 회의와 16차례의 내부 논의 및 준공청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 규정, 각종 조례의 형

식 및 내용 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확인,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 설정하였다.

또한 이 지역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실시하여 공신력 있는 분석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후 조례안 초안 제정 및 수정, 조례안 입법시도, 시민 학생 대상의 홍보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지만,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 실패로 활동을 잠시 중단하였다. 활동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8월 3일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시작
- 학생인권조례에서 권리조례로 사업명칭 변경
- 홍사단 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포럼준비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YMCA, 시의원, 교육위원, 교수 등이 참가하여 학생권리조례제정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 공식 모임 16회(비공식 20여회) - 조례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의 성격규정, 각종 조례의 형식 및 내용검토, 가와사키현 조례 제정과정 학습, 조례안에 들어갈 영역과 항목 설정, 조례안 제정 관련 설문 제작 등
- 한국사회조사 연구소 협조 - 학생인권관련 교사, 학생, 시민 설문조사 실시 (2005년 12월)
- 준공청회 - 참실보고대회(2005. 12. 02. 금. 전남중학교) 통한 준공청회 형식의 토론
- 공청회 전까지 3차례의 수정작업
-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2005. 12. 23)
- 전국참실발표회 학생인권조례 토론(2006년 1월)
- 4차 수정안 완성(2006년 1월)
- 2006년 2월 보수적 시각의 조례안으로 수정
- 1-4월 교육위원회 상정시도, 교육청 협상, 발의실패
- 5·18청소년문화제 “레드페스타” 학생권리조례부스 설치. 인권지수 설문 및 조례안 내용 홍보 및 의견수렴 (2006년 5월)
- 2006학생회 임원아카데미를 통한 조례안 홍보 방안 모색

2) 2차 시기

2008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당선

되었다. 1차 시기 교육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힘들었던 상황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이에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고, 지난 1차 시기 활동을 평가하면서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10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 학생 인권 관련 제반 단체들이 모여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1차 시기보다 많은 단체들이 추진위 참여에 동의하였고, 특히 권리의 주체인 학생·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청소년 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시기를 준비한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조례제정추진 사업과 함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1차 시기의 과오로서 추진위 참가 단체에서만 조례 제정활동이 공유되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속 단체별 특성에 따른 활동들도 전개하고, 추진위원회 차원의 대중적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광주전남 교육연대, 청소년공동체희망 광주지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학생생활연구회,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홍사단,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광주YMCA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국청소년학생연합광주지부, 광주YWCA, 문화행동 s#arp 등이 있다.

2차 시기 활동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8년 10월 20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활동 시작
- 11월 3일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및 사업 설명회
- 11월 12일 추진위원회 내부 세미나 실시(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조례안 설명)
- 12월 9일 추진위원회 활동 재개에 관한 기자회견(교육청 브리핑룸)
- 12월 13일 대시민 홍보활동(삼복서점 앞)
- 학교생활규정 분석 및 인권침해적 요소 추출(2009년 1월 활동)
- 2009년 1월 19일 교육감의 인권조례제정 비협조 발언에 관한 대책회의
- 2월 ‘학교인권조례’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 : 기존 ‘학생인권조례’로 진행기로 결정
- 3월 ‘그린마일리지제’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4월 4일 대시민 홍보활동(삼복서점 앞)
- 4월 16일 ‘그린마일리지에 관한 토론회’ 개최
- 5월 11일 ‘조대여고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 6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린마일리지제’에 관한 진정서 제출
- 7월 - 11월 조례안 수정 및 검토 작업, 조례안 전문가 검토 후 초안 마련
- 12월 12일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010년 3월 4일 KBS TV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패널참여
- 5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2차시기 20여 차례의 내부 회의 및 토론 실시

3) 2010년 6월 2일,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 이후로 진보 교육감 및 진보적 교육의원 다수 당선되었다. 그 중, 추진위원회의 사실상 대표인 장휘국 전)교육위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고, 교육의원 당선자 4명 중 3명이 학생인권조례 협약에 체결하여 교육위원회 7명중 4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는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기존 교육위원회 조례안 상정 전략 뿐 만 아니라, 교육감 발의, 주민발의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 추진과정 속에서 들어난 논쟁, 시사점

전국 최초 2005년 광주학생권리조례제정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고군분투한 싸움을 시작으로 2010년 진보세력의 상징이 되는 교육감 당선자들이 주요 의제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수장들이 ‘무상급식’을 공약화하며 ‘한정적 복지’를 기조로 하고 있던 MB 정부를 당황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일시방편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해주는 척 했던 교육청 관료적 방식이 이제 ‘보편적 학생인권’이란 새로운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를 끼고 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총체적인 청소년의 권리를 환기시키고, 그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시민사회단체의 공세적인 참여 필요

학생인권조례가 진보성향 정치인의 주요공약이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지라도, 수동적이고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일부 교육청 관료와 보수적인 교육의원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견제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와 교육운동 단체, 사회복지사, 교육복지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기존 연대방식의 위장되거나 중립적 개입이 아닌, 보다 공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실질적인 권익이 우선

학생인권조례 논의를 할 때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적 효과 VS 인권침해’라는 대결 구도를 상정하고, 끝도 없이 미로 속을 헤매다 결국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흐지부지 끝을 맺는다는 것이다. 결국, 당파적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이 조례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인권의 보편성, 주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보다 강한 학생인권조례로 추진되어야 한다.

3)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참여보장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의 올바른 내용이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보수단체에서 한다면 불 보듯 뻔 하지만, 서울추진본부처럼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한다면 암묵적인 동의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례 주체인 청소년 참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경기도처럼 학생참여위원단을 구성했지만 자문위원단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배제한 경우를 어떻게 봐야하나? 학생인권조례의 청소년참여는 핵심이자 기본사항이다.

5) 추진방향에 대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정되는지 또한 중요하다.

먼저 교육의원(광주 사례)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 교육청 관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더라도 정치적인 개입 및 의견표명을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부담이 적었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교육위원의 존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상당수의 교육의원들이 많아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힘들었고, 결국 반대하는 쟁점사항을 가지고 몇 차례 중도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상정도 못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차원의 몇 차례 대시민 홍보, 기자회견, 공청회 등 여론작업을 진행했지만, 일선 현장 교육주체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기에는 물리적인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다.

앞서 김재석 선생님이 발제하신 주민발의 경우로 할 경우, 주민자치운동의 형태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서명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교육청을 소외시키는 꼴이 되 버리고, 조례안을 받을 보수적인 오세훈 현)서울시장과 시의원이라면 조례안을 무력화 시키거나 교육관련 조례라는 이유로 교육감에게 이송할 우려가 있다. 서울추진 본부가 서명운동을 위해 투여할 수 있는 예산, 인력이 되는지 또한 타진해 봐야 한다.

반면, 교육감 발의(경기도 교육청) 경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례 이슈화 및 여론화, 조례 실행 동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해 조례 추진 기구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 세부 검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조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년이란 짧은 기간 속에 보수진영의 비판제기에 대한 소모적인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찬반논란만 벌린 채 안전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어떠한 방법이던 간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시민들의 힘을 가진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어찌되던 이 운동에 시작을 알리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추진본부 발족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향후 서울추진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공조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별 무리 없이 제정되길 바라며,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노력해나갔으면 한다.

[부록]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관련 주요 자료 모음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발표 최종안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최종안 주요 내용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초안과 최종안 비교
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6.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7.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 조사 결과
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과 병행되어야 할 조치

[부록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주요 경과

-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인선은 민감한 문제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문위원들이 더해지고 빠지는 과정을 통해 조정됨. 자문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전망을 세워나가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자문위원들은 교육 현실과 학생인권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가지고 자체 인권 학습을 수행하는 등 긴 사전 작업을 거쳤음.
- 2009년 10월~11월의 두 달 동안 연구용역팀이 ▲ 설문조사 ▲ 면접조사 ▲ 외국과 다른 지역 사례 연구 등을 거쳐 12월 초에 연구보고서를 제출.
- 2009년 10월부터 학교 공지 등을 통하여 학생참여기획단을 모집, 11월말쯤에 학생참여기획단 구성을 완료. 이후 4가지 미션으로 학생참여기획단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이나 학생인권조례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나 캠프 등도 논의되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함.
- 2009년 10월 말~11월 동안 지역별로 사전협의회 개최. 특수교육 등 여러 분야들에 관해서도 사전협의회 개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2009년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2010년 1월에 자문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3차례 개최됨. 2월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제출. 이후 교육청 주최로 3월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 1회 추가 개최.
- 2010년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집회의 자유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B안으로 입법 예고.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10년 6월 7일 심의 보류 처리됨.

□ 2009. 05.28(목)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09.07.30(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교육감)

· 자문위원 9인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위원장: 박노현 교수, 부위원장: 김인교 교장)

□ 2009.08.20(목) :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오동석 아주대 교수 외 3명)

- 교장, 교감, 생활지도교사, 경기도교육위원, 법학교수,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 학생

대표는 포함되지 않음.

□ 2009.09.25(금) :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 및 제6차 협의회 실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대회 개최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경기교육가족의 영상 의견/ 조례 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관련 설문지 작성

□ 2009.09.28(월) : **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연구 개발 경력이 선택 기준으로 작용

□ 2009.10.6(화)~10.20(화) : **찾아가는 생활지도 연수**

- 중·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연수 실시

□ 2009.10.16(금) : **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회 자문기구로 학생참여기획단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모집·운영기로 결정

□ 2009.10.23(금) : **학생인권조례 관련 10문 10답 완성**

□ 2009.10.28(수)~11.3(화) :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

- 경기도 지역을 9개 권역(용인, 의정부, 고양, 수원, 안산, 안양과천,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으로 나누어 자문위원 4명을 한 팀으로 구성, 현장 방문
- 권역별 학생,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 약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팀별로 자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설문조사를 실시
- 6개 권역은 실시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성남, 구리남양주, 부천 지역은 실시하지 못함

□ 2009.10.26(월)~11.05(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학생 작품 공모전 실시**

-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별로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각 영역별 우수 작품 교육감상 시상기로

□ 2009.11.20(금)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 제정팀과의 협의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중간 보고회 개최
- 학생작품공모전 입상자 발표
- 일본가와사키 조례 제정팀 8명과의 협의회 개최

□ 2009.11.26(목) :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

- 전문상담교사, 대안학교 교원, 특수학교 및 학부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와 4그룹으로 나누어서 사전협의회 실시

- 2009.12.10(목) :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교육감상 시상. 작품 결과는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탑재

- 2009.12.17(목) :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 자문위원회 초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0.01.11(월) : **자문위원회 제11차 협의회 실시**
 - 자문위원회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자문위원회 입장문 검토. 이후 홈페이지 탑재
 - 초안에 대한 전문가 15인(한국외대 교육학 유성상 교수 외) 의견조회

- 2010.01.19(화) : **자문위원회 초안 1차 공청회 개최**
 - 경기 남부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 개최

- 2010.01.24(일) : **자문위원회 초안 2차 공청회 개최**
 - 학생참여기획단 중심, 학생 대표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 2010.01.25(월) : **자문위원회 초안 3차 공청회 개최**
 - 경기북부 지역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 2010.02.10(수) : **자문위원회 최종안 발표**
 -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은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교육감 선택의 몫으로 남겨둠.

- 2010.03.07(일) : **경기도교육청 주최 공청회 개최**

- 2010.03.23(화)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 예고**
 -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B안으로 입법 예고

- 2010.04.30(금) : **경기도교육청 내부 법제 심의**

- 2010.06.07(월) : **경기도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
 -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

[부록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발표(2010.02.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조례 제 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

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 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태 현황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록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의 위상과 목적

-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치법규로서의 위상
-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두텁게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경기도의 교육자치규범. 학생인권의 실현은 소통·자율·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타인의 인권을 아울러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기여

□ 조례안의 체계 및 구성

- 5개의 장(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과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으로 구성
-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제1조), 개념 정의(제2조),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제3조),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의 총론적 책무(제4조),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제5조) 등을 규정
- '제2장 학생의 인권'에서는 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등 10개 절로 구분하고 각 절마다 하위 조문을 두어 학생인권의 목록을 규정.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에서는 인권교육과 홍보(제29조 내지 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 제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 제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을 규정하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에서 학생인권옹호관(제40조 내지 제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내지 제47조) 등 실효성 확보장치를 마련. 학생인권옹호관은 강제적 조치보다는 상담, 조사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

□ 주요 조항 해설

○ 제4조(책무) 제3항

- 학생인권의 보장은 교사나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배려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의 책무로서 명시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소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차별 등 조례안이 구체화하지 못한 많은 차별 영역을 시정해가고 그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준거 규정으로서 기능.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항

- 체벌 금지
- 학생간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교육방법, 상담교사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개선,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마련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조례안은 0교시,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
-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규교과 외 학습시간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침. 이에 조례안은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과중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조례안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
- 조례안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으며, 그 밖의 용모 제한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
- 조례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복 착용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 탈선 증가나 학습분위기 훼손 등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으나, 개성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두발 길이 규제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획일적 통제방식이 지니는 문제가 크다는 점, 탈선을 막고 학습분위기를 조장할 다른 교육적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점,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 두발길이 규제 금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규정

○ 조례안 제13조(사행활동의 자유) 제4항

- 조례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음을 규정
- 휴대전화를 통신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를 제한하되, 교육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등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부분적으로 규제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조례안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양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반성, 서약 등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조례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
- [A안]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음을 규정. 이때 교육 목적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학교장의 부가조건 또한 너무 늦은 시간 회피, 안전 확보를 위한 요청 등 집회방식에서 부수적인 제한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B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체화한 규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헌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 이러한 기본권은 조례로써 부정될 수 없음. 다만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뿐.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 구성 및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걸맞은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식 또한 길러짐.

○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조례안은 학생에게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조례안은 징계사유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징계공고 금지 등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특히 징계가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함.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조례안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적절한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마련,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프로그램 마련,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의 편의 제공 및 참여 보장, 가정형편 때문에 빈곤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의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해 규정

○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제33조(보호자 교육)

- 조례안은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로 하여금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

○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 조례안은 인권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제도개선 등 학생인권 관련 안전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지는 전문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학생 스스로의 의견을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제40조 내지 제44조 학생인권옹호관

- 조례안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

- 학생인권옹호관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 권리구제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옴부즈퍼슨(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여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 조력 등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특성상 적절하다는 고려에 따라 조례안은 시정권고를 넘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수단이나 제재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할지역별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3년 임기, 1회 연임 가능)을 두고 전문조사원 등 옹호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인원을 두도록 함.

○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부칙 제2조 제2항

- 조례안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 단위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토록 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교장,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하였으며,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한을 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초안 비교

<표> 최종안과 초안의 주요 조항 비교

표제	최종안	초안	비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의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언어”의 예시 포함
폭력으로부터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u>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u>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u>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u>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폭력양태의 구체화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③ <u>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u>학습곤란을 겪는 학생</u>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권)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서의 권리 추가 -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예시 추가
정규교과 외 학습활동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u>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u>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견 수렴 명시
휴식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u>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u>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u>강요함으로써</u> 학생의 휴식을 취할	제11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	- 휴식권을 ‘휴식을 취할 권리’로 명확하게 표현 - 휴식권의 구체화 - 강요 금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	
사 생 활 의 자 유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신설
사 생 활 의 비 밀	제14조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적 정보에 교육비 미납사실 등을 예시로 제시
사 상 양 심 종 교 자 유	<p>[A안]</p> <p>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안]</p> <p>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p> <p>①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③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반성문 자체 허용의 의미 명확화</p> <p>[A안]</p> <p>- 제1항에서 기본권 확인, 제2항에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구체화, 제3항에서 종교의 자유 구체화</p> <p>[B안]</p> <p>- 표제 등의 “사상” 삭제</p> <p>-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른 양심의 개념 표현</p>
표 현 의 자 유	<p>[A안]</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③ 학생은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p>	<p>[A안]</p> <p>- 권리 규정과 학교 의무 조항 분리</p> <p>[B안]</p> <p>-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 삭제</p>

	<p>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B안]</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사 회 복 지 권 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누구나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 - 상담조력에서 적절한 지원으로 확대
교 육 환경	제22조 ② 학교는 <u>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u> , 청결한 환경의 유지, <u>화장실과</u>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u>녹지공간 확대</u>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②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적절한 탈의 및 휴게 등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화장실 예시 추가 - 학교환경에서 '녹지공간 확대' 예시 추가
징 계 등 에 서 권 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③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표제로 변경 - 징계 내용 공고 금지 포함
청 구 권 및 청 원 권	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u>행사로</u>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권 등 행사에 대한 비밀 보장
소 수 학 생 의 권 리 보 장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u>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u>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신설

	<p>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학 교 내 인 권 교 육 등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권 관련 교육 강조
학 생 인 권 응 호 관 설 치	제40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39조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임명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 요구 - 옹호관 활동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제 도입
학 생 인 권 응 호 관 의 직 무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u>직권조사</u>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u>공표</u>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5.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옹호관의 직권조사 인정 -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구체화

	위해 필요한 업무	위해 필요한 업무	
--	-----------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09년 10월)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공부도 즐겁고, 공부가 즐거워야 몰입도 가능하겠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일변도로 학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몰입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고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발규제를 없애면 공부는 안 하고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될 거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과 몇몇 일반학교의 선도적인 실험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이지 않은 우려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려 규제 일변도로만 가다보면 학생들이 더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억눌리는 지점에서 더 자극을 받는 법이니까요.

☞ 공부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람살이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리고 인권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익힐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과나 도덕과 등의 교과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이란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입니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권 교육을 열심히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수업 방해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 학생들이 인권을 서툴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방임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방임, 의무와 무책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그 길,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아 좁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길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인권을 배우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나 갈등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에게도 인권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부르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학생도 교사도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생도 교사도 인권에 대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이 없는 교육’은 질서정연해보일지 몰라도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보살핌은 없는 교육이 아닐까요?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교육이 아닐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하겠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볼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권리 주체들의 인식과 힘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줍니다. 인권교육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함께 간다면,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인권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권이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권리가 주어질 때 책임 또한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에게는 인권이 더욱 필요합니다.

3. 학생들 사이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폭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로서는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 가운데 학생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 성적이나 생활을 비관한 학생 자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등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사의 경우 종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보호자의 경우 학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

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방임 내지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드시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훈계해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고삐를 죄고 뽕뽕 묶어두고 울타리를 친다고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외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목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와 타인의 몸을 돌볼 줄 아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학생은 자기 몸은 물론 타인의 몸을 제대로 살피고 돌볼 줄 모릅니다. 교사가 아무리 일일이 살핀다 하더라도 매순간 모든 학생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과 예방교육은 학생의 안전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피로도와 부당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사들을 문제집단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요즘 과잉체벌 교사처럼 간 큰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교사의 과잉 생활지도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는 교육권의 본질적 요소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규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야 할 인권을 좀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이 문제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인권의 지지자이자 옹호자로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면, 종종 교사 집단 전체가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학생인권이 무시된 사례를 보면 해당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구조나 ‘군사부일체’로 대표되는 사회의식의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구조와 사회의식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생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나서주신다면, 오히려 교사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학생 지도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정당하고도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당연히 교사들에게도 즐거운 학교일 것이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지켜질 수 있는 학교일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한 또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권보다는 의무가 먼저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면서 배우고, 참여하면서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당혹스런 상황이 간혹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교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교사에게 상처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교사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강자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사를 괴롭히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즐기는 학생의 경우는 ‘강자’에게 도전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에게 힘을 과시하고픈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여교사 등 약해보이는 교사들이 주로 그런 학생들의 표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변화하고,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학생은 몸이 아픈 환자에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의사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해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를 부러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몇몇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도 어쨌면 아픈 환자의 뒤틀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뿌리를 건드려야지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나쁜 행동’은 더 약한 사람에게 옮겨갈 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행동을 죄다 잘못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사의 뜻이나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 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지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인권은 몸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정,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학생 지도’와 학생인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지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교사는 늘 옳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을 ‘지도’하려다 보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칙(학교생활규정 등) 역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학생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때, 학생인권 존중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교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 ‘지도’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준수와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위협에 처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이때 행사되는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힘이니깐요. 다만 학생의 위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압이 가해지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입니다.

7.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 수업시간에 교사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대다수 교사들이 차이도 크고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수 학생을 동시에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원책 없이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통제방식에만 내맡겨두고 있는 학교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 뵈었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개개인의 책임만 늘여가는 방향을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역시 수업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학생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돌봄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의 기본이겠지요. 한 선생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

다. 한 학생이 자기 수업시간마다 자고 있기에 앞으로 불러내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한 듯해 보이는 그 학생의 모습이 한심해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홀어머니와 함께 새벽 바닷가에 나가 고깃배에 잡힌 생선들을 껍째에 담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새벽일을 하고 학교에 등교하니, 1교시 수업에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연을 알고 나서 그 선생님은 그날로 체벌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판단하는 자기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통감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처럼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수업방식이 그 나이의 특성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일로 고민이나 불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연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었을 때 다양한 대처법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교사의 역량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 교사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학생의 문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입니다.

8.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인권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의 의견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해나가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교사, 학생, 보호자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일환으로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도 적극 독려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 독려하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3주체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선으로 지켜져야 할 학생인권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학생인권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더라도 고문수사, 불공정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은 기본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또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이 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학생이 침묵하고 있고 소수 학생만 인권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다수의 학생이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침묵은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학교 상황이 낳은 결과이지, 학생인권 보장을 미뤄두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아직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욕구가 깊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내던져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소수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인권이 돈독히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화함으로써 학교가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분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제정 등 학교 단위의 자율권은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규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제기구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바깥에 구제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밖으로 알려져 학교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구제장치가 없는 인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권리구제기구들이 설립된 이유도 이러합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나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보호자 등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나 절차, 학교 바깥에만 설치할지 학교 안에도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학교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학생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칭찬 받을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사건이 숨겨지거나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고, 학교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公的) 기구는 요구됩니다.

☞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인 만큼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또한 그 혼란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서도 학교 밖 권리구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존재를 혼란을 야기하는 훼방꾼이라고 보지 마시고 학생인권 보장을 지원하는 협력자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10년 1월 1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저희 자문위가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보완 지점을 짚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자문위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위원회는 1월에 예정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 경기도 교육위·의회와의 간담회, 서면·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문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잘못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저희 자문위가 가진 부동(不動)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발표하는 것입니다.

1.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인권은 응급환자에게만 공급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흡입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어린 학생들의 외침이 우리 어른들의 심장을 두드린 지도 오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응당 보장했어야 할 권리를 한참이나 뒤늦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만큼, 모든 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관리자도 보호자도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할 기회에 초대받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인권 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준비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국제사회는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교육이 인권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교육이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교육 △질 좋은 교육, 그리고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학생의 관심과 소질, 성숙 정도 등에 따라 교육적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교육은 폭력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자는 제안이지, 교육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합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교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창조적인 학습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삶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 학교, 참여를 통한 변화를 성취하는 경험이 제공되는 학교,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자 교육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학교의 상이기도 합니다.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인 지시를 거둬낸 자리에는 대화와 소통이 쉼트게 마련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소통의 과정은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글로벌 창의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교육의 초석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자율과 획일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자율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폭력과 강제, 차별에 기반한 교권 행사와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부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행사로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깃뻛힌 사례들을 여러 차례 목도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교권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자의성(恣意性)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인격에 내맡겨둘 수 없기에, 사회에 법이 필요하듯 학교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충실하게 행사될 때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방식으로 21세기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할 때 엇갈림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강요가 학생들의 반감을 사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사의 지도나 교권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교육적 만남과 지도 방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위협에 빠뜨리는 학생이 있다면 마땅히 제지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지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이 행사되거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살핌이 자의적으로 철회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부적응이든 공격성 증가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을 살피고 대처방안을 기획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나 치마 길이를 재려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 야간자율학습에 남게 하고, 과반수 이상이 옆드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됩니다.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누군가 불공정거래 규제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이나 과속규제가 운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두 법 모두 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규를 학교현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하위규범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 상위 법규도 부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상위 법규와 그 법규에 따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5. 몇 가지 쟁점 조항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빚어진 논란의 대상은 일부 조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우려만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과 조례 제정을 회구해온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우려도 부풀려진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두발의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2조 1항). 또한 그 밖의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2조 2항). 그동안 두발단속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만 끓어올랐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술하게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두발 지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그 규정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엄격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따르느라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그 바람에 교사의 권위도 서지 못했습니다.

- 두발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두발에 오히려 집중됩니다. 두발 단속을 피하느라 등교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머리를 자르느라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두발 제한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흐뜨려온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두발을 풀어주면 탈선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불이 났기에 연기가 나는 것인데도 ‘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복장 자율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교복, 양말, 신발 등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생 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2조). 이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교복 착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복 착용을 단위 학교별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양말 색깔, 신발 모양, 교복 바깥에 입는 외의의 착용 여부나 색깔까지 정해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느라 학생과 보호자는 없는 신발이나 외투를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또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은 입지 못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복장규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3)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17조 2항)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절차 규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입니다. 자문위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뿐이며, 다만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학생은 인간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학생들이 집회를 열게 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나친 추측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 학내에서 집회를 연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내집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여는 것이 우려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절차가 잘 돌아가면 됩니다. 자문위 초안이 17조 1항에서 먼저 학생들의 의사 표현권을 보장하고, 뒤이어 2항에서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2항의 권리를 학생들이 굳이 꺼내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학내 집회 자유 보장으로 학생들이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정치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정치적 공간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화’라는 딱지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4) 반성문 강요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16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생각을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술서가 아니라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생·보호자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과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 조항은 결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성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반성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만드는 행위, 학생의 자기 성찰과 교사와의 교육적 소통은 사라진 채 억지로 쓰인 ‘반성문’만이 교육이 이루어진 증거인 양 남아 행세하는 비교육적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10조 1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교육당국이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남아서 공부할 수 있고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실제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동의한 것처럼 일괄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만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당할 때 학습 효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체벌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상해나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습니다.

-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몽둥이나 손찌검, 발길질을 행하는 일부 교사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사들도 상담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때 체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가장 무서운 효과는 그 폭력이 내재화되고 악순환 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솔선 수범하여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학생 간 폭력을 예방, 근절하려는 교육적 지도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13조 4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는 보장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휴대폰은 이미 대다수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호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휴대폰을 압수했을 경우 그 보관 기간과 돌려주는 방식도 해당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8)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20조 1항)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 및 조율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유엔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성숙의 기회를 차단해온 기존 학교 모델’로부터 ‘학생의 참여를 통해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한에 걸맞게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학생이 있더라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정신 아닐까요.

6.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념 공세에 대하여

- 마지막으로 저희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 교육’이라거나 ‘운동권 주장’이라거나 특정 단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거나 하는 이념 딱지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나 운동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하여 인류의 양식이 된 ‘인권’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맹비난하는 것은 인권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자문위는 특정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인권전문가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복무해온 교장·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 전체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공약이었고, 김 교육감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30일 자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운데 조례 초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한 것을 두고 재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경기도민의 박수를 받아 교육감이 재선에 이른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잘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표를 보낸 주민들의 선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저희 자문위는 부당한 억측이나 이념 공세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이 잘못 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1.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의견조사 결과

□ 지역별 간담회 현장 설문조사 결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경기도내 6개 권역을 돌면서(애초 9개 지역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플루 위험으로 3개 지역은 취소됨)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설명하고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 현장 설문조사에는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관리자 69명 등 총 515명이 참여.

- 사전협의회에는 원하는 교사나 학생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인 보호자,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 학생회장 등 임원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확인. 특히 학생, 보호자의 경우 80~90% 이상이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경우에도 높은 공감대를 표현.

<표 1> 경기도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 대답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108	60	168	8	1	9	177
	비율(%)	61.02	33.90	94.92	4.52	0.56	5.08	
교사	명	38	55	93	36	12	48	141
	비율(%)	26.95	39.01	65.96	25.53	8.51	34.04	
보호자	명	58	47	105	18	5	23	128
	비율(%)	45.31	36.72	82.03	14.06	3.91	17.97	
학교 관리자	명	9	32	41	22	6	28	69
	비율(%)	13.04	46.38	59.42	31.88	8.70	40.58	
계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자문위원회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 학생인권 보장에 있으며, “자유로운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는 철학에서부터 출발. 또한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을 열 가지 열쇠말을 통해 제시.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쇠말

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6. 학교는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삶도 돌봐야 한다.
7. 학생의 모든 권리는 연관되어 있고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8. 학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을 돌봐야 한다.
9.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의 언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10.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의미있어진다.

- 위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기본 정신과 철학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공감 정도도 매우 높음을 확인. 이와 더불어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훈련되어야 하고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도 학생 87.56%, 보호자 78.91%에 이르렀고, 교사 역시 절반 이상인 56.3%가 긍정적으로 대답

<표 3>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에 담긴 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공감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긍정적 대답	③ 별로 공감 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 하지 않음	부정적 대답	응답자수
학생	명	72	86	158	18	1	19	177
	비율(%)	40.68	48.59	89.27	10.17	0.56	10.73	
교사	명	31	67	98	31	12	43	141
	비율(%)	24.11	47.52	71.63	21.99	8.51	30.5	
학부모	명	54	47	101	25	2	27	128
	비율(%)	42.19	36.72	78.91	19.53	1.56	21.09	
학교 관리자	명	12	32	44	21	4	25	69
	비율(%)	17.39	46.38	63.77	30.43	5.80	36.23	
계(명)								515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 사전협의회에서 학생인권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가지 과제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결과, 파악된 교육 주체별 학생인권 과제는 아래와 같음.

<표 4> 학생인권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섯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항목	학생 (177명)		교사 (141명)		보호자 (128명)		학교 관리자 (69명)		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1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119	67.23	50	35.46	44	34.38	13	18.84	226
2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	85	48.02	84	59.57	84	65.63	43	62.32	296
3	자율적 학생회 · 학생 활동 보장	99	55.93	67	47.52	48	37.5	48	69.56	262
4	무작위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보장	52	29.38	27	19.15	26	20.31	13	18.84	118
5	각종 고민상담, 교육 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	60	33.90	79	56.03	84	65.63	69	100	295
6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59	33.33	29	20.57	61	47.66	30	43.48	179
7	학생인권 침해 구제 수단 강화	39	22.03	18	12.77	38	29.69	21	30.43	116
8	체벌 금지	80	45.20	40	28.37	37	28.91	41	59.42	198
9	가정형편/성적/용모 차별 금지	66	37.29	49	34.75	43	33.59	31	44.93	189
10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89	50.28	64	45.39	48	37.5	37	53.62	238
11	각종 문화 활동 접근과 참여 보장	40	22.60	44	31.21	42	32.81	44	63.77	170
12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차별 금지	26	3.09	31	21.99	20	15.63	39	56.52	116
13	인권교육 강화	25	14.12	41	29.08	33	25.78	47	68.12	146
14	기타	3	1.69	0	0	0	0	0	0	3
계		991		723		703		498		2,403
※ 6개 권역 사전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표 5> 교육주체들의 우선 요구 학생인권 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	두발 · 복장	자치활동	과잉학습	집단괴롭힘	체벌
교사	집단괴롭힘	상담 등 복지	자치활동	과잉학습	두발 · 복장
보호자	집단괴롭힘 / 상담 등 복지		징계	자치활동 / 과잉학습	
관리자	자치활동	인권교육	문화권	집단괴롭힘	체벌

□ 연구용역팀 설문조사 결과

- 자문위원회는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진에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의식 조사와 학생인권 증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의뢰. 연구용역팀은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음.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학생 당사자(중·고등학생 1086명 중 961명이 응답)의 의견이 8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표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찬성한다	947	87.4
반대한다	14	1.3
의견없음	123	11.3
합 계	961	88.7.0
※ 진영중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중등학생의 경우 두발·복장 규제를, 교사와 보호자는 모두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강제 과잉학습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강제 야자·보충수업 문제나 두발규제 문제에 대해 학생뿐 아니라 상당수의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교육주체들이 지적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인권문제(복수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 생	초 등	언어폭력 433명(12.5%)	학교폭력 330명(9.5%)	잘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중 등	두발규제 770명(24.8%)	복장규제 580명(18.7%)	강제 과잉학습 464명(15.0%)	단체기합 및 체벌 278명(9.0%)	학생의사표현 규제 277명(8.9%)
교 사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410명(24.0%)	강제 과잉학습 348명(20.4%)	두발규제 174명(10.2%)	학생의사표현 규제 151명(8.8%)	단체기합 및 체벌 141명(8.3%)

보호자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233명(22.8%)	강제 과잉 학습 152명(14.8%)	학생의사표현 규제 145명(14.2%)	단체기합 및 체벌 109명(10.6%)	두발규제 103명(10.1%)
※ 진영종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또한 연구용역팀은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조사함. 이에 대해 △입시경쟁 해소 △인권교육 강화 △학생 참여 보장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리구제수단 강화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고루 선택함.

<표 7>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구 분	중·고등학생		교 사		보호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입시경쟁 해소	489	16.0	447	26.0	103	10.1
인권교육 강화	261	8.5	227	13.2	80	7.8
노후한 교육 시설 개선	188	6.2	197	11.4	109	10.6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368	12.0	176	10.2	32	3.1
권리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278	9.1	108	6.3	233	22.8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237	7.8	119	6.9	60	5.9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	124	4.1	76	4.4	145	14.2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325	10.6	76	4.4	56	5.5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474	15.5	207	12.0	152	14.8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310	10.2	88	5.1	54	5.3
합 계	3,054	100.0	1,721	100.0	1,024	100.0
※ 진영종 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10년 2월 10일)

-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조화와 공청회, 자문위원회 자체 논의 등을 거쳐 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조치들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들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 보장을 개별 학교나 교사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급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병행조치들은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일선 학교의 의무 이행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1. 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제시

1)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 학교 단위에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 조례에서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 중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인지 등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지침서 형태로 마련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안적 생활지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내 권리구제절차 또는 상담체계의 정비 지원

- 학교 단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내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나 행동이 조례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학생인권문제를 총괄 지원하고 학내 해결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내 구제 절차는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인권상담실이나 학생인권옹호관,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교육청-일선학교-지역사회의 상보적 관계 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 합니다.

- 체벌을 대신할 상담체계 구축과 대안적 교육 지원 방식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절차를 마련할 때, 조례안의 정신에 맞는 학생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생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제시

- 학생들이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학생자치기구에게 보장해야 할 구체적 권한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 취약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학생선수,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시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인권과 조례에 관한 적극 홍보와 교육

1) 모범 사례 발굴 소개

-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참고할 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모델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나 정책연구학교 지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구

- 체벌 없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 교사의 정당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 등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관리자·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 과정에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연수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

육청 담당자들은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할 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례 내용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생인권 교육안 마련과 강사단 구축

- 학생인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제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 학생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될 때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모델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교육적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한을 정리하여 교사 연수에서 활용한다거나, 교사회의 법정기구화 등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과 창의적 역량에 기초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